

국회, 올 첫 개회

문희상 의장 "입법부 본연의 역할 최우선 국회 신뢰 받으려면 개혁입법 선행돼야" 외통위원장 윤상현 · 예결위원장 황영철

국회가 여야 대치로 빛은 장기간 공전을 끝내고 7일 오후 들어 처음으로 회기를 열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선 안 된다는 점,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30일 동안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 신화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2000여건 가운데 73%가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제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마무리해 국회사단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국회는 또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도 진행했다.

두 상임위 위원장직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 몫으로 배정됐던 상임위원직이다. 이에 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253명 가운데 윤 의원은 115표(45.45%)를 얻어 22명의 외통위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로 위원장직을 거머쥐었다. 황 의원은 203표(80.24%)를 얻어 49명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당선 후 소감 발표를 통해 "정치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특히 외통위가 그 수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나라 힘을 키우는 외교, 나라 경제에 도움 되는 외교가 되도록 하고 외통위가 여야 간 신사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변 동료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8일부터 9일 간 휴회하고 이달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부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개회사를 문희상 의장이 하고 있다.

靑 "북미회담 이후 전체 상황 파악 중"

"문 대통령 역할 커져"

청와대는 7일 합의를 무산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강경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구체적인 최근 통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북미 양국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며 "(상황 파악이 끝나면) 액션 플랜이 정해질 것이고, 그 부분이 가시화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끝난 후 언제쯤 액션 플랜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아까의 대답과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같음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뉴시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타결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오전 7~9시, 오후 6~8시 한해 허용... 토·일요일 등은 제외 택시 월급제, 초고령 택시 감차 추진 · 올 상반기 '플랫폼' 출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시간대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및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 감차 등에도 뜻을 모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허용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국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택시업계는 기간 지속적으로 지

적반어은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 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울러 대타협기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연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즉각 구성할 예정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22일 출범 이후 논의를 이어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족노동조합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 공방 끝 비공개 전환

여야, 망언 3인방 · 손혜원 등 징계안 18건 일괄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3인방'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후반기 특위 구성 이후 회부되고 숙려기간이 지난 8건의 징계안 뿐만 아

니라 전반기 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건도 일괄 상정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징계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5건도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윤리심사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지만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은 징계안 한건도 회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위원회에 걸린 모든 안건을 심사 진행하기



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18건에는 '5·18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재판정락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손혜원 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징계안은 신속히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윤리심사전문위에 전달됐다.

한편 민주당은 윤리특위 개최 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우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회의장내 개인 노트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였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